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사례

— 국세청, 2021. 3

## 사례 1 (주)☆☆(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사례 (2020년 귀속)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산업용로봇 제조업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500억	550억	600억	700억	800억
자산총액	800억	800억	900억	900억	950억
연구·인력개발비	1.5억	2.0억	2.0억	2.3억	2.8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소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증기분 방식:  $(2.8\text{억} - 2.3\text{억}) \times 50\% = 2,500\text{만 원}$

— 당기분 방식:  $2.8\text{억} \times 25\% = 7,000\text{만 원}$

— 따라서 (주)☆☆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7,000만 원 공제

## 사례 2 (주)★★(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합성수지선 제조업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1,600억	1,650억	1,700억	1,800억	1,900억
자산총액	2,100억	2,150억	2,300억	2,500억	2,700억
연구·인력개발비	4억	5억	5억	6억	8억

##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9조)
- 증가분 방식:  $(8\text{억} - 6\text{억}) \times 40\% = 8,000\text{만 원}$
- 당기분 방식:  $8\text{억} \times 8\% = 6,400\text{만 원}$
- 따라서 (주)★★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8,000만 원 공제

**사례 3 (주)◇◇(중견기업(신성장·원천기술))의 R&D 세액공제액**

##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반도체 제조업
- 상장여부: 비상장
- 연구개발 활동: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중 ‘지능형 반도체·센서’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개발 진행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2,100억	3,000억	3,500억	4,000억	4,500억
자산총액	2,000억	2,500억	3,000억	3,100억	3,500억
연구·인력개발비	4억	5억	5억	6억	8억

##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9조)
- 비용분:  $8\text{억} \times 20\% = 1\text{억 } 6,000\text{만 원}$
- 비율분:  $8\text{억} \times \frac{8\text{억}}{4,500\text{억}} \times 3 = 426\text{만 원}$
- 따라서, (주)◇◇는 비용분과 비율분을 합산한 1억 6,426만 원 공제

## I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심사 I

- (주)◇◇ 사례와 같이 기업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비용검토는 국세청에서 진행합니다.  
(관련규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2항, 제13항)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분야·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례 4 (주)◆◆(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 상장여부: 코스닥등록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7,000억	8,000억	8,500억	9,000억	9,500억
자산총액	3,000억	3,500억	3,800억	4,000억	4,500억
연구·인력개발비	20억	30억	35억	40억	45억

##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일반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증가분 방식:  $(45\text{억} - 40\text{억}) \times 25\% = 1\text{억 } 2,500\text{만 원}$
- 당기분 방식:  $45\text{억} \times \min \left( \frac{45\text{억}}{9,500\text{억}} \times 50\%, 2\% \right) = 1,065\text{만 원}$
- 따라서 (주)◆◆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1억 2,500만 원 공제

**사례 5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 사업자 개요

- 상 호: ◆◆                              - 업 종: 플라스틱사출 제조업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20억	25억	30억	30억	33억
자산총액	30억	33억	33억	35억	40억
연구·인력개발비	2억	2.1억	2.3억	2.5억	3.3억

## ○ 세액공제액 계산

- ◆◆는 중소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증가분 방식:  $(3.3\text{억} - 2.5\text{억}) \times 50\% = 4,000\text{만 원}$
- 당기분 방식:  $3.3\text{억} \times 25\% = 8,250\text{만 원}$
- 따라서 ◆◆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8,250만 원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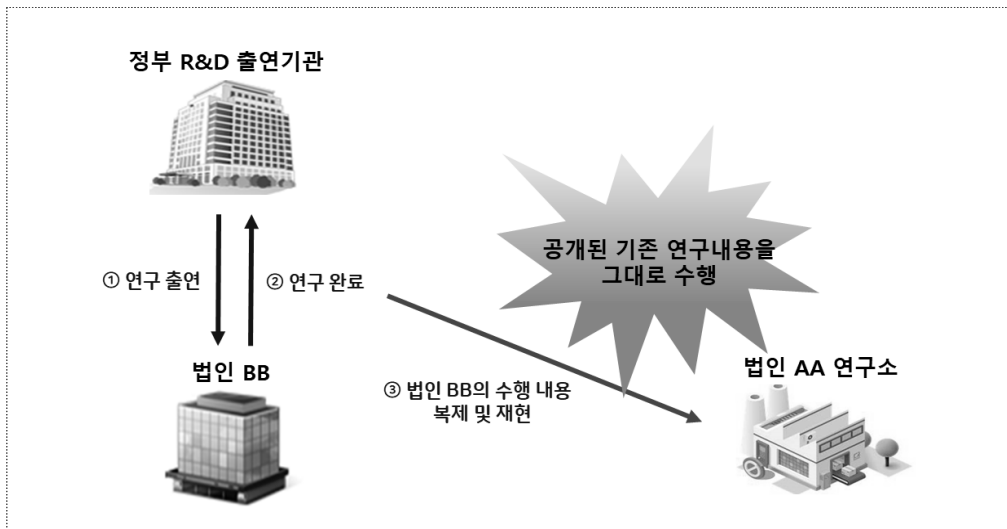
## 참고 2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 사례 1 타사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내용 복제 및 재현

#### □ 사실관계

- 법인 AA는 ◇◇◇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법인BB가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
- 법인BB의 최종보고서는 공개용으로 법인 AA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개발 보고서로 제출함

Ⅰ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Ⅰ



#### □ 쟁점 사항

- 공개된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연구 내용을 재현, 보고서를 그대로 복제 제출한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인지 여부

#### □ 불인정 사항

-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타사가 이미 수행하여 결과까지 공개된 기존 연구내용을 재현 및 복제한 활동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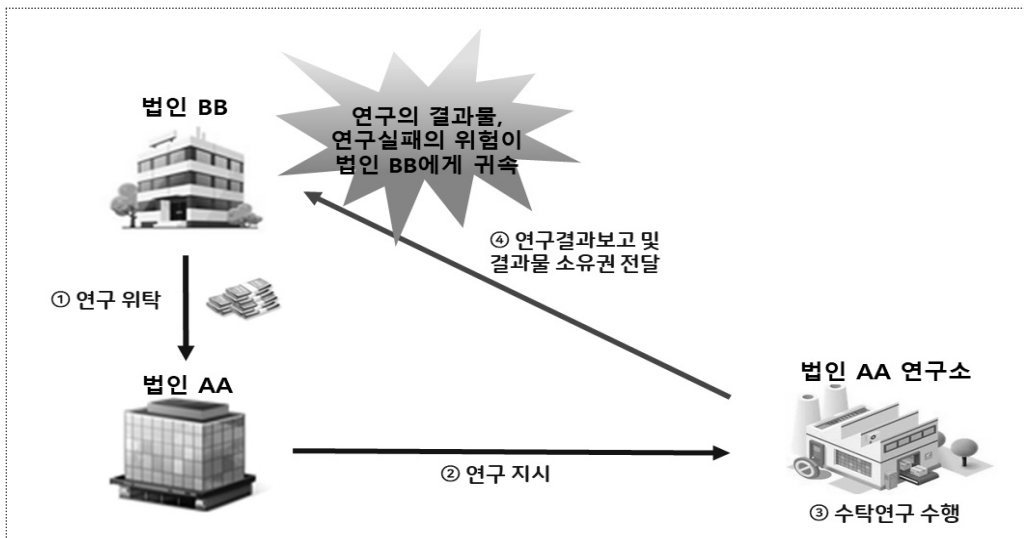


## 사례 2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

### □ 사실관계

- 법인 AA는 법인 BB로부터 부품 개발을 위탁받아 연구 활동을 수행했으며, 해당 연구의 결과물은 모두 법인 BB에게 귀속됨
  - 법인 AA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의 인건비 및 시제품 제작비 〇억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Ⅰ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Ⅰ



### □ 쟁점 사항

- 업체로부터 부품 개발을 위탁받고 자체적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제품을 개발한 경우, 해당 연구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불인정 사항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은 실패의 위험과 결과물의 소유권이 모두 위탁업체에 있으므로, 수탁업체는 자체적 연구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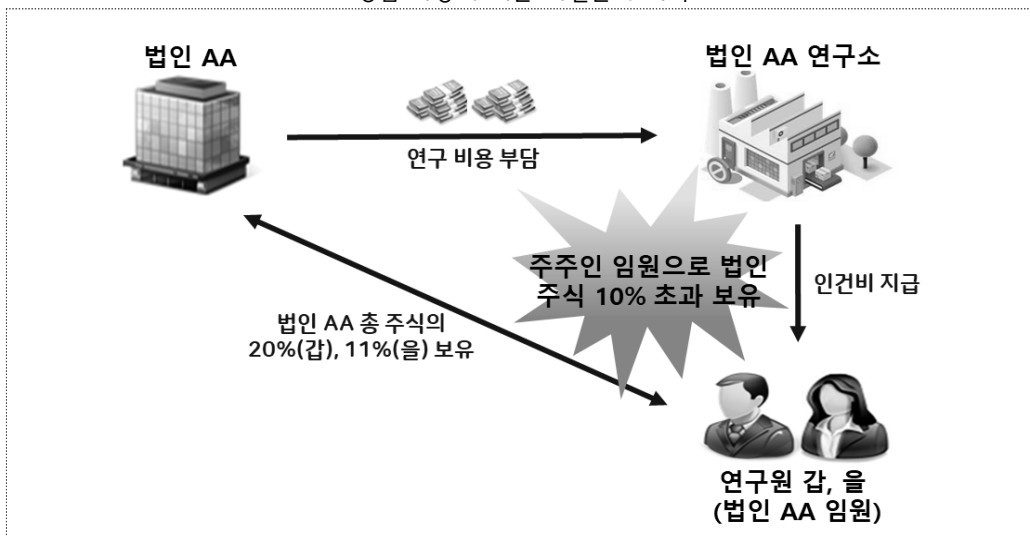
\* 조특법 시행령 제1조의2 제7호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비연구활동에 해당

### 사례 3 주주인 임원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한 인건비

#### □ 사실관계

- 법인 AA는 대표이사 甲(법인 주식 20% 보유), 상무이사 乙(법인주식 11% 보유)을 전담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 □□프로젝트 과제 개발을 수행하면서 연구원 甲, 乙의 인건비 ○억 원에 대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



#### □ 쟁점 사항

-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임원인 전담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불인정 사항

- 주주인 임원으로서 당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불인정

\*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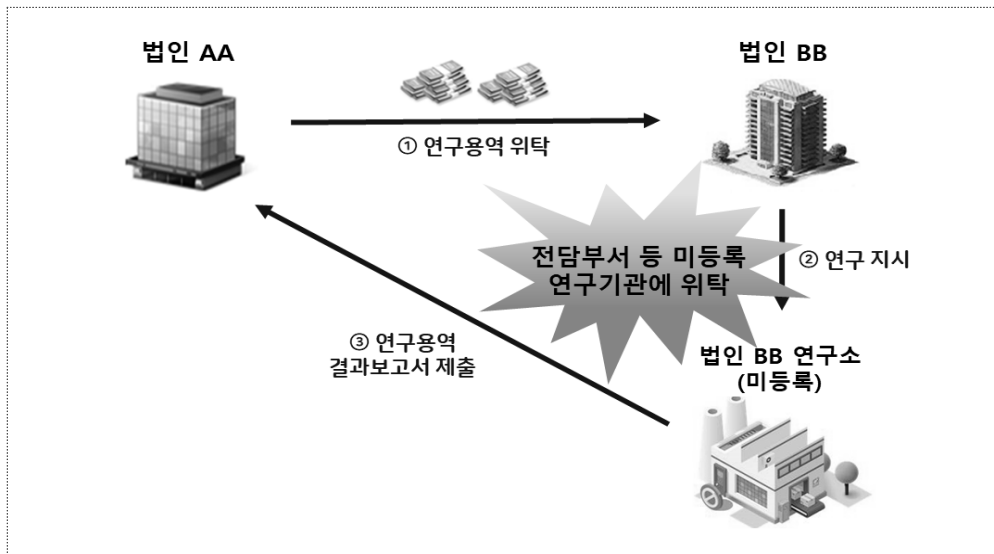


#### 사례 4 연구전담부서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에 지출한 위탁개발비

##### □ 사실관계

- 법인 AA는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 BB에 연구과제 개발을 위탁함
  - 법인 AA는 법인 BB에 대해 지출한 위탁개발비 ○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Ⅰ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Ⅰ



##### □ 쟁점 사항

-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지출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불인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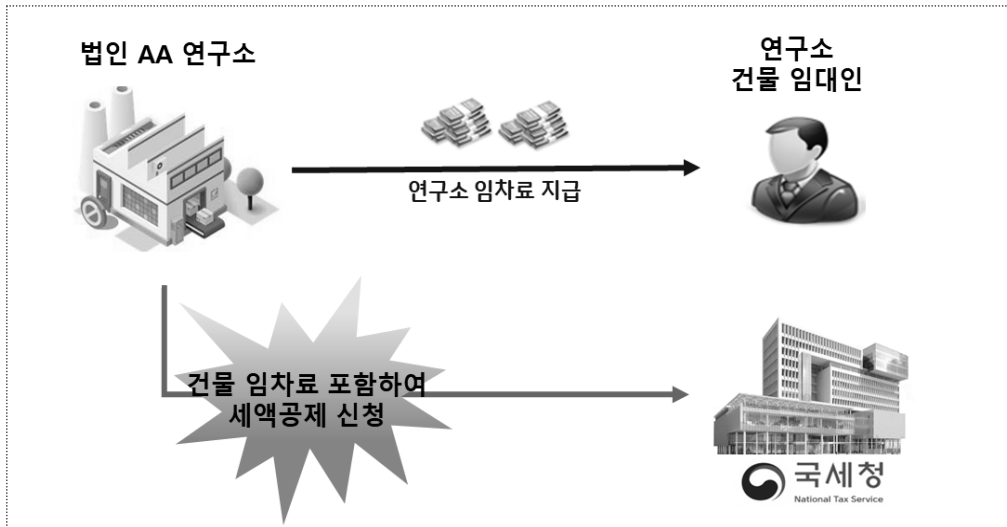
- 법인BB는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위탁개발비 공제 대상 업체가 아니므로,
    - 법인 AA가 쟁점 법인에 지출한 위탁개발비 ○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 \*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해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위탁해야 공제

## 사례 5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를 재료비로 계정과목 분류

### □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구소 건물의 임차료 〇억 원을 재료비로 계정과목 분류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Ⅰ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Ⅰ



### □ 쟁점 사항

- 연구용 건물의 임차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재료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 불인정 사항

- 조특법 시행령[별표6]에서 공제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특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구시설 건물의 임차료는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6] 1. 가. 3)에 계기하는 비용에 미해





## 참고 6 - 예상 질문 및 답변

### Q. 사전심사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A.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Q. 본청과 지방청의 업무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청은 일반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심사업무, 재심사업무를 하며, 지방청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심사업무, 중소기업 세무상담 등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Q. 지방청에 사전심사 전담팀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전심사 신청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실시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 Q. 신고내용 확인, 감면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사전심사는 과세 목적이 아닌 사업자 친화적 조세행정을 구축하여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서류는 성실신고 지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Q. 예상 처리기간은?

A.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내 처리 예정이나,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불가피하게 지연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처리되지 않는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안내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Q. 기술검토는 전문가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술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현재 산업분야별 임기제 5명을 채용하여 연구·개발활동에 대해기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어 다양한 부분에 대해 기술심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Q. 고도의 기술관련 서류가 접수되는데 이에 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심사시 회사가 제출한 연구 관련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양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기술의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심사담당자가 세법에 따른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Q. 현장확인 필수사항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제도시행이 1년이 되었는데, 제도의 취지대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나요?**

A. 많은 사업자가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청 전담팀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